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관리



2017. 7. 1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현황

- '16년말 기준 국내 CCTV 설치 대수는 약 1천3백만대 이상으로 추정
- '15.2월 수도권 시민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노출(파이낸셜 뉴스)
- '16.6월 현재 190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가 약 19만대 CCTV 모니터링 실시

왜 규제가 필요한가?

- CCTV는 촬영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자동 수집하는 장치
 -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설치 운영을 원칙 금지하되,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된 정보는 안전 관리하는 것이 원칙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7호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시행령 제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 Circuit Tele-Vision), 네트워크 카메라

- 현행 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며, 설치(또는 촬영)의 지속성이 있어야 함. 카메라와 전송 또는 저장장치를 모두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운영** (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예방 및 수사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헌법기관 규칙 (선관위 규칙, 대법원 규칙 등)에서 명문의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예) 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등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②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 CCTV는 민간사업자도 설치·운영 가능하나, '교통단속', '교통정보 분석' 목적 CCTV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함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

- 현행 법 제25조는 '범죄예방 및 수사', '교통단속' 등을 CCTV 설치·운영 요건으로 하며, '범죄'란 형벌(징역, 벌금 등)이 부과되는 위법 행위를 말함. 따라서 교통단속을 제외한 과태료 부과 징수 목적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된 CCTV 설치 운영 범위를 초과함
- 다만, '범죄'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쓰레기 등 투기)도 포함되므로 경범죄를 예방 및 수사하기 위한 목적의 CCTV도 설치 운영 가능하다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과태료 부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의 CCTV 설치 운영은 허용된다 보기 어려움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법령

근거법령	조항/서식	기기유형	설치장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1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	주차대수 30대 초과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주택단지
아동복지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 아동보호구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지노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보호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무인감시카메라(CCTV)	목욕장의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폐쇄회로 텔레비전	국제여객터미널의 여객대기지역, 항만시설 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폐쇄회로 텔레비전	실험실 및 보관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체 감시카메라	지하공공보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③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법 제25조제2항, 시행령 제22조)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에는 설치·운영 허용(자해·자살, 폭력행위 예방 등 필요)

법 제25조제2항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벌규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실시 (법 제25조제3항,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교도소, 정신보건시설 포함)은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공청회, 설명회·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설치 필요성과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설치·운영 목적의 변경 또는 추가시에도 의견수렴 실시 필요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④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같은하는 중요한 절차**, 반드시 준수 필요
 -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군사기지,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다음의 경우 안내판 설치 대신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
- *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도 민원안내실 등의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가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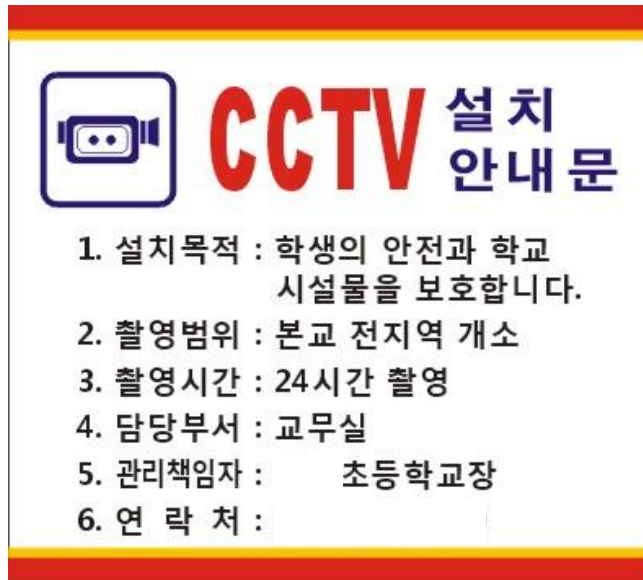
<안내판 설치 대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경우 >

-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신호위반단속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2)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 CCTV 안내판 예시

안내판 예시



CCTV 설치 안내문

1. 설치목적 : 학생의 안전과 학교 시설물을 보호합니다.
2. 촬영범위 : 본교 전지역 개소
3.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4. 담당부서 : 교무실
5. 관리책임자 : 초등학교장
6. 연 락 처 :



CCTV 설치안내
CCTV Camera

목 적 Purpose	역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열차안전운행 등을 위한 감시 및 녹화 Monitoring and recording for station facility safety, fire and crime prevention and safe train operation
촬영시간 Running Time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24 hours a day
촬영범위 Scope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등 주요시설물 Station lobby and platform and other major facilities
책 임 자 Contact	교 대 역장 Seoul Nat'l Univ. of Education station Master T. 02) 6110-2230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관리책임자 직책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업체
관리책임자 직책 및 연락처도 기재)

백화점 등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녹음기능 사용 금지 (법 제25조제5항)

법 제25조제5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임의 조작 관련>

- 목적 외 임의조작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동일한 중대한 위법 행위
- 다만, 당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조작은 가능하므로, CCTV 조작시 설치 운영 목적을 숙지하고 그 목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예)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범인 추적을 위해 조작하는 경우 등

<녹음기능 금지 관련>

- 비공개된 타인간 대화 내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
- 단, 비명소리를 인지하는 지능형 CCTV, 관제사와 통화 가능한 CCTV는 제외

처벌규정 위반 시 **형사벌 부과**(3천만원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⑥

☞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5조제6항)

법 제25조제6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행자부 고시 제2016-21호)' 제47조에서 규정
 1.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관리책임자 지정, 취급자 교육 등 포함)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안전한 저장·전송 기술의 적용(저장시 비밀번호, 네트워크 카메라는 암호화)
 4.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매년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31일까지 행정자치부 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법 제25조제7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_____(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예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5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법 규제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⑧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시 조치사항 (법 제25조제8항, 시행령 제26조)

법 제25조제8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CCTV 위탁시 수탁자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위탁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등을 관련 문서에 명문화하여 위탁
 - * 필수 기재사항 : 위탁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CCTV 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CCTV 안내판에 수탁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CCTV 설치 운영시 조치사항 요약



CCTV 설치 운영시 조치사항 요약

절차	조치사항
1. 법령상 요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 목적 적합성 점검- 비공개 장소, 사생활 침해 장소 등 장소적 특성을 현장 확인하여 위법 소지 없는지 확인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행정예고,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3. 설치, 운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운영 여부 결정(위탁시 관계규정 준수)- 안전성 확보 조치 계획 수립- 운영인력 및 예산 확보
4.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판 부착(위탁시 수탁업체 연락처도 표기)- 녹음 기능 탑재 여부 확인하고 불능 조치- 임의조작 금지 등 관계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홈페이지 공개

기타 영상정보 관련 쟁점



A middle-aged man with a mustache and short grey hair stands on a wooden porch. He is wearing a white t-shirt under a dark olive-green jacket and blue jeans. He holds a black pump-action shotgun horizontally in front of him with both hands. The porch has wooden planks and two striped cushions with red, white, and blue patterns. To the right is a brick wall with a window and dark green shutters. To the left is a green lawn and a white pillar. The text "Drone Slayer" is overlaid in a large, white, serif font with a blue outline.

Drone Slayer



No Drone Zone

[뉴스 1]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 논란

[News]



원칙적으로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에 따라
노사간 협의 사항임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를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허용 여부를 두고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온라인으로 실
시간 열람할 수 있는 기능 때문임

이에 국회는 CCTV와는 달리 네트워크 카
메라 설치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음.

그런데 어린이집 CCTV 시장 과열에 따라
업체들이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CCTV에도
실시간 열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 논란

(어린이집 원장이 동의 절차 없는 CCTV를
설치해놓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시
간 열람을 통해 근무상황 감시가 가능)

[뉴스 2] 해킹된 전 세계 CCTV 영상 또 실시간 노출...한국 542건



World Fusion camera in Korea Republic (P) Seoul



World Fusion camera in Korea Republic (P) Seoul



World Fusion camera in Korea Republic (P) Seoul

15년 12월 5일 S사의 IP CCTV에 담긴 영상정보가 실시간으로 한 웹사이트에서 유출되고 있으며, 노출된 해당 영상은 실시간으로 지연없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다고 밝힘



World Fusion camera in Korea Republic (P) Seoul



World Fusion camera in Korea Republic (P) Seoul



World Fusion camera in Korea Republic (P) Seoul

해당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이트라 국내법상으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아 IP CCTV 관리자 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사용자들 스스로 IP CCTV 카메라 관리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

**식당, 미용실, 슈퍼마켓 등 한국 CCTV 영상정보 542건 실시간 노출
유명 IP카메라 업체 8곳 등 카테고리로 구분...구글지도와 연계해 위치정보 제공**

○ 출처 :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793&kind=&sub_kind

[쟁점 2] 통합관제센터 운영 논란



<부산>

- 부산진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 총 5천802대 (방범·주차단속·쓰레기무단투기단속·재난감시·초등학교 관리 등)
- 현재 담당기관별로 운영
- 실시간 감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 신속대응 및 예산절감
(부산일보, '11.6.8)



<여수>

- 18억원
- 364㎡의 실내
- 55인치 LCD 21면으로 구성된 멀티비전과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740대의 CCTV를 한 곳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뉴시스, '12.4.30)

참고 : 통합관제센터 관련 쟁점

-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 논란
 - 범죄 예방 등 사회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시각 존재
- 운영예산 및 관제인력 지원 체계 마련
 - 현재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 인 구조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규제 필요
 - 이용 · 제공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명확화, 제공자 면책

참고 : 영상정보 열람 관련 쟁점

-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 요구시
- 우산, 지갑 등 단순 물품 분실 확인을 위해 열람 요구시
-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비식별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민원인이 불특정 시간대 영상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시
- 수사기관이 수 개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제공 요구시
- 개인간 분쟁 과정에서 일방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향후 검토사항

다양한 영상기기 출현에 대한 대응체계 부재

- 고정형 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뿐만 아니라, 이동형 기기(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에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도 보호 강화 필요**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영상정보의 특성상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개인식별성이 매우 높아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독립된 규율체계 필요**



모든 국민을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다양한 형태 기기를 법 규제 범위에 포함
- 열람 청구, 보관 요구, 삭제 요구, 분쟁조정 등 **국민 권익보호 장치 강화**
- 대규모 처리자(통합관제센터 등)의 **안전조치 의무 등 보호조치 강화**

감사합니다

